

수 신 편집국장·보도국장
참 조 미디어·노동 담당기자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담당 : 최유리 홍보실장 010-7111-4758)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사 앞에서 언론개혁 4대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려 11일 언론노조 제주지역협의회·민주노총 등 “지역언론 생존문제 정부와 여당 대책 제시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편집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언론지원법 마련 ▲언론책임 강화를 위한 배액배상제 도입 등 언론개혁 4대 입법을 요구하는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1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사 앞에서 첫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언론노조 제주지역협의회와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외 임원 및 사무처, 문도선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장, 서승환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장,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김덕중 제주축협 지회장이 참여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신문법이 일몰 조항 탓에 올 연말 폐기를 앞둔 상황 ▲방송결합 판매 제도의 급격한 변화 예상 ▲포털 네이버·카카오의 ‘1도 1사’ 입점 정책 등으로 지역언론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약속한 정책협약에 있다”며 “남은 임기 1년, 대통령은 정책협약의 약속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언론노조와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강 공적기금 신설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시민의 삶을 대변했다면 4·3사건을 규명하는 데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론개혁의 본질인 언론의 정치·자본 독립을 구현할 4대 입법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과 지역언론 다양성을 말했고 이젠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약속을 미룰 것인가”라며 “지역언론 다양성 문제는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에서 배제된 노동자와 소외계층, 지역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당사에 언론개혁 4대 입법 요구안과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박규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에 언론노조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진: <https://bit.ly/357wwZ6>